


보 도 자 료			
 환경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.0	보도일시	2017년 1월 9일 09: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금한승 과장 / 이장원 서기관 044-201-6330 / 6331
	배포일시	2017. 1. 6. / 총 21매	

화학물질 안전은 높이고, 미세먼지 걱정은 줄인다

- 2017년 환경정책,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 -

- ◇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- 미세먼지 저감,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
- ◇ 환경 서비스 확대 - 생활환경 개선, 도심 생태공간 조성, 친환경 소비·생활
- ◇ 미래 환경수요 대응 - 신기후체제 대비, 환경 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
- ◇ 새로운 환경제도 정착 - 화학안전·피해구제제도 정착, 통합관리제 시행

- 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교육부 외 4개 부처(복지부, 고용부, 여가부, 식약처)와 함께 1월 9일 09:30, 세종컨벤션센터(세종시)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.
 - 이번 업무보고는 ‘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 구현’이라는 주제 아래 6개 부처 합동으로 보고했으며,
 - 환경부는 ‘안전한 환경, 행복한 국민’을 주제로 ①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, ②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, ③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, ④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.

1.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

□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(risk)를 저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.

① 미세먼지 감축

-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* 시범운영('17.4~), 초미세먼지(PM_{2.5}) 측정망 확충('16년 191개소→'17년 287개소)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%에서 70%로 높인다.

* 슈퍼 컴퓨터가 과거 기상·대기-미세먼지 농도간 인과관계를 학습, 농도 예측

-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*하고,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**,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5배로 강화('17.2)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.

* '16년 4.8만대 → '17년 6만대

** ('17) 서울시 → ('18) 인천 및 경기(17개 시) → ('20)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

- 아울러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·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('17.4)하고,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둥·하북·산서성에서 요녕성·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.

-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·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,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,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,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.

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

-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(~'17.6)하고,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,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·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.

-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,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한다(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목표).
-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(약 7,000종)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토록 하고,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(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연내 개정)

③ 가슴기살균제 피해 지원

-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,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·판정을 마무리하고,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('17.1), 천식('17.4)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.
-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*을 구축하고,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.

*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·판정 진행상황 알림, 지원금 신청 등 일괄 지원

④ 선제적 녹조 대응

- 발생원인·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을 연내 완료하고,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 조사 지점 확대(36→56개 지점), 생태공원 정밀 조사·평가 등을 통해 4대강의 현상태를 정확히 진단한다.
- 녹조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총인(T-P) 처리를 강화하는 지역을 확대*하고, 평시에 댐·보·저수지에 환경대응용수를 확보했다가 녹조 발생 시 7일 이상 일제 방류하는 방안을 마련('17.4)·시행한다.

* (기존) 한강·낙동강 중·하류 지역 44곳 → (확대) 금강 포함 2배 수준으로 확대

- 한강·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율을 제고('15년 53% → '16년 57% → '17년 60%)하고, 소독 부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우수운영기법을 발굴·전파하는 등 먹는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
⑤ 지진·기상 예·경보 고도화

- 지진 관측망을 확충(156 → 210개소)하고,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 시스템을 구축('17.11)하여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(일본 수준)로 단축한다.
-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('17.5)하여 폭염, 장마 등 이상 기후에 대한 장기 집중연구를 추진하고, 현업 활용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에 착수('17.1)하는 등 기상예보 능력을 고도화한다.
- 노약자, 어린이 등 계층별 폭염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폭염지수 서비스('17.5~), 기상, 농업, 생활·공업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던 가뭄 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·경보제('17.1~) 등으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.

2. 환경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

□ 소음·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,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.

① 소음·악취·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

- (소음)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('16년 5,050건 → '17년 5,200건)하고,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하며('16년 9개 → '17년 12개 지자체, 누적), 교통소음의 85%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 표시제를 도입한다('17.9).
- (악취)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*하고, 도심지 18곳(서울·대구·광주)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.

* (폐기물차량) 청소차·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5.7만대('17.1월~)

(축사) 강화된 축사 시설기준 및 악취배출기준 마련('17.9월)

- (실내공기 및 석면) 어린이집·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* (1.4만 개소), 실내건축자재(페인트 등 6종) 사전적합 확인제('17.1), 지하 역사 석면 제거 완료**,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(2만동)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(risk)를 적극적으로 제거한다.

* ('13) 0.3 → ('14) 1.2 → ('15) 4.1 → ('16) 5.8 → ('17, 목표) 7.2 (누적)

** 1차('09~'12), 2차('13~'17)에 걸쳐 전국 346개 역사 석면 제거완료('17년 6개소)

②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

- 훼손지를 복원하여 도시 내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마당*, 생태하천** 복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, 광주광역시 등 기존 도시 5개와 세종 신도시에 저영향개발(LID) 기법을 적용하여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다.

* 자연마당 조성(누적, 개소) : ('14) 2 → ('16) 8 → ('17) 12

** 생태하천 조성(km, 누적) : ('14) 1,149 → ('16) 1,369 → ('17) 1,469

③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

- 주변 관광자원 연계, 수익사업 추가발굴* 등으로 흥천 성공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, 올해 중 5곳(아산·청주·영천·경주·양산)을 완공하고 3곳(인제·음성·제주)을 착공하는 한편, 중국 생태마을에 접목('17.9)하는 등 국내외 확산을 도모한다.

* 유리온실(열대식물원) 설치, 야생화단지 확대, 퇴비·야생화 화분제작 등

④ 친환경 소비·생활기반 구축

- 빈병 보증금 인상(소주병 40→100원, '17.1), 무인회수기 확충* 등으로 빈병 회수율을 높이고, 수거차량 증차 등을 통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**하며, 단독주택 지역 거점 수거시설(재활용 동네마당)을 확충('16년 284개소 → '17년 447개소)한다.

* ('15) 24대 → ('16) 103대 → ('17) 국산화 완료 및 보급 로드맵 마련

** 수거 대수(만대) : ('13) 16 → ('14) 35 → ('15) 78 → ('16) 110 → ('17, 목표) 135

- 도시민(연천·파주), 청소년(교과·진로체험) 등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('17년 5개소), 국립공원 명품마을* 2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확대한다.
 - * ('13) 10개소 → ('16) 16개소 → ('17, 목표) 18개소 (누적)
- 생활밀착형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(55→60개, 누적), 녹색매장 지정(350→400곳, 누적) 등을 확대하고, 탄소포인트제를 친환경 운전예까지 확대하여 녹색 소비·생활을 더욱 확산한다.

3.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

□ 파리협정,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,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한다.

①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

- 후속협상 방향 등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마련하여 제출('17.5)하고,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을 지원('17년 6개 시·도)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한다.
-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 되도록 협의하고,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제도개선*을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풍력발전을 활성화한다.
 - * (현행) 先 입지결정 후 환경영향평가 → (개선) 사전협의 후 입지결정
-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을 확대(1천 → 5천 가구)하고,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('17.9) 및 국가환경위성센터 조성을 완료하여 한반도 기후변화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.

② 환경 신산업 발굴·육성

- 친환경차·물·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.

- **(친환경차)** 다량수요처 발굴(장기렌트 등 6천대),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(화물차·초소형차 등),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('16년 750기 → '17년 2,610기)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*을 촉진한다.
 - * 전기차 보급대수(누적) : ('13) 1,871 → ('15) 5,853 → ('16) 11,767 → ('17) 26,000
- **(물산업)** 물산업진흥법 제정, 중장기 R&D 투자전략 마련('17.6),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('17.12) 등 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.
- **(생물산업)**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을 제정·시행하고('17.6),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개발('16년 13건 → '17년 24건) 및 생물소재 민간이전(1,520점)을 통해 그간 확보한 생물자원정보의 상용화·산업화를 지원한다.
- **(기상산업)** 기상·기후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(7→9종, 누적),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확대 지정*하여 컨설팅·마케팅 등을 지원한다.
 - * ('15) 153개소 → ('16) 175개소 → ('17) 250개소 (누적)

③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

- 성과 중심의 연구관리 혁신방안('17.2), 환경난제를 해결을 위한 중장기 R&D 투자전략('17.4) 등을 통해 R&D를 혁신하고,
- 유망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출시하고(330억원, '17.6),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('17.6), 환경 신기술·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('17.5) 등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 원* 달성에 도전한다.
 - * 연간 환경산업 수출액(조원) : ('13) 7.9 → ('15) 8.2 → ('17, 목표) 9.0

④ 노후 환경인프라 현대화

- 노후 상수도 현대화(745km, 국고 512억원), 노후 하수관로 정비(500km, 2,310억원) 등 재정사업과 수질관련 13개 시설*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환경개선,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지역활력에도 기여한다.
 - *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, 하수처리장 4개소,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개소

4. 새로운 환경 제도의 조기 정착

□ 화평·화관법, 피해구제법, 통합법 등 신규 환경제도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, '18년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.

①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

- '16년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98%에 달하는 등 연착륙했다고 보고, '17년에는 업종·규모별 보험요율 차등화 및 온라인 가입시스템 개발('17.4), 단체계약 상품 출시*('17.6) 등 제도를 보완한다.

* 방지시설 공동운영 사업장 등이 단체로 가입하여 보험료 절감 가능

- 기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진폐증, 중금속 중독증 등 질환에 대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*을 추진하고('17.6~), 장애인·저소득층 대상 법률자문·소송지원을 개시('17.1~)하는 등 구제급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.

②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

- 금년부터 적용되는 발전·소각·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통합환경 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(25개소), 전문기술교육(32회) 등을 제공하고,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콜센터를 운영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.

- 아울러 '18년 시행 예정 업종(철강·비철금속·유기화학)에 대해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 발간('17.12), 모의허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.

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

- 재활용업계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(안)을 마련('17.3)하여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등 '18년 시행을 준비한다.

- 매립·소각부담금 부과·징수 시스템 구축('17.12) 및 모의적용('17.4, 100개소), 재활용선별장 확충('16년 11개소→'17년 17개소) 등 이행기반도 정비한다.

④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

-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기업의 선제적 조치를 독려하고,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사업장 특별 관리로 화학사고를 '15년(113건) 대비 35% 이상 감축한다.
- 대·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운영지원('16년 585개 → '17년 600개 사업장),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('16년 1,019개 → '17년 2,000개 기업)을 확대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는다.

□ 현장의 애로를 상시 청취하도록 규제현장방문·간담회를 정례화하고 30여 년간 계속된 매체별·실국별 칸막이를 없애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안해결을 위한 융합행정, 원스톱 행정을 실현한다.

○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공개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, 에코스터디 미팅*, 프레스 투어 등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며, 국민참여형 홍보** 방식을 적극 발굴한다.

* 출입기자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제도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토론

** 사업 기획부터 주민 참여로 스스로 스토리와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(친환경에너지타운 등)

□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“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”면서 “금년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”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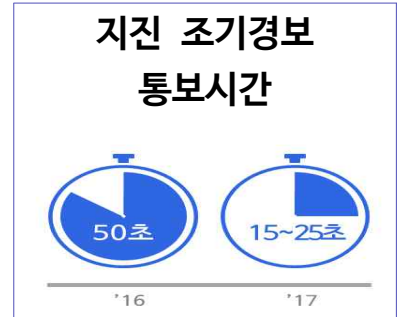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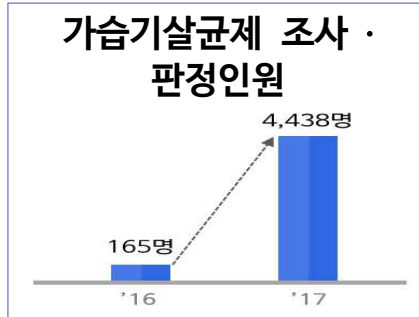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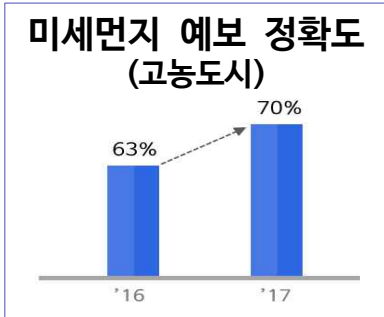
- 붙임 1.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.
2. '17년도 업무보고 기대효과.
3. 질의·응답.
4. 전문용어 설명. 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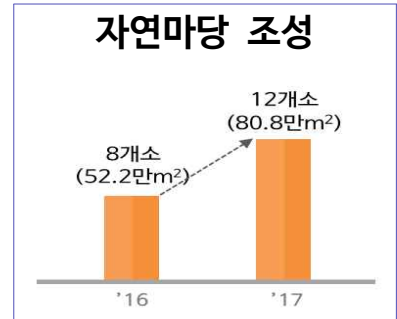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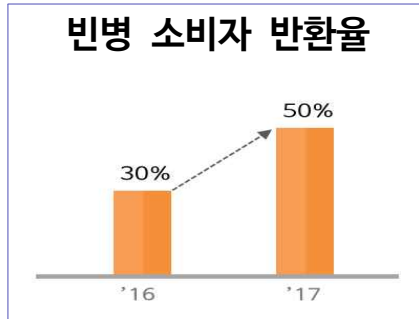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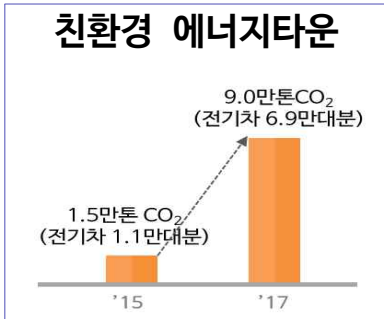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장원 서기관(☎ 044-201-63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제도 개요	시기
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(20만원~200만원) * (대상) '05년 이전등록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·불합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* (일정) ('17)서울시→('18)인천·경기→('20)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	1월
② 고농도 상황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정기간 고농도시 수도권 630여개 공공·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,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시행 * ('17) 수도권, 공공부문(시범) → ('18~) 수도권 외, 민간부문 단계적 확대 	2월
③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물질의 인체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을 지정하여 안전기준(유해물질 함량 등)과 표시기준(유해문구 등)을 설정·관리하는 제품 확대 * ('15) 방향제 등 15종 → ('16) 토너 등 18종 → ('17) 부동액, 자동차워셔액 등 27종 ※ 안전·표시기준 위반시 회수명령 및 고발, 위해우려제품은 회수권고 	10월
④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속한 피해 조사·판정체계 구축, 폐 이외 질환 인정범위 확대 * (조사·판정기관) 1개소→11개소 (건강모니터링 대상) 1~3단계→4단계 추가 (폐이외 질환인정) '17.1월 태아피해 → '17.4월 천식 등 → 독성실험 등 진행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	1월
⑤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 단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진 관측망 확충으로 조기경보 대국민 통보시간을 2배 이상 단축 * 지진 관측망 : ('16) 156개소 → ('17) 210개소 * 통보시간 : ('16) 50초 이내 → ('17) 15~25초 이내 (※일본: 5~20초 이내) 	7월
⑥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타이어만 보급하는 소음성능 표시제 본격시행('19)을 대비하여 자율표시제 시행 * ('17) 자율표시제(8개기업) → ('19) 의무제 전환(승용차용) → ('28) 전 제품 확대 	9월
⑦ 빈병 보증금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증금 인상, 재사용 표시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빈병반환 유인 * (보증금) 소주병 : 40원 → 100원, 맥주병 : 50원 → 130원 * (재사용 표시) 녹색계열 → 붉은색 계열, 크기는 150% 확대 	1월
⑧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·외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와 이익공유 의무화 * (대상) 신약·화장품·기능식품 제조 등 바이오업계 약 1,000개 업체 (국가책임·점검기관(환경·복지·해수·미래부, 산림청 등)) 유전자원 접근·이용 신고수리·점검, 국내기업 권리보호, 정보제공 등 업계 지원 	7월
⑨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차 등 지원차종* 확대 및 수소차 세제감경 신설** 등 * 전기차: ('16) 10종 → ('17) 초소형차·화물차(개조차) 등 총 13종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: ('16)3종 → ('17) 아이오닉·니로 등 5종 ** '17.1월부터 개소세 최대 520만원, 취득세 최대 200만원 	1월
⑩ 통합환경관리 제도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10개 인허가를 사업장 당 1개로 통합하는 통합관리제 시행 * ('17) 발전·소각증기 → ('18) 철강비철·유기화학 → '21까지 19업종 (대기·수질 1:2종) ※ 해당업체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규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전, 기존 사업장은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신청(허가배출기준 부여) 	1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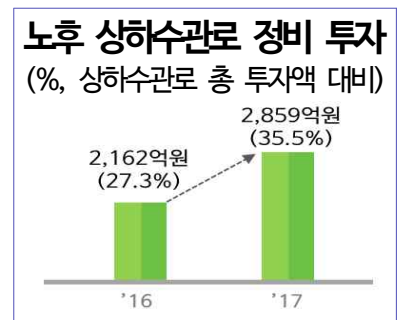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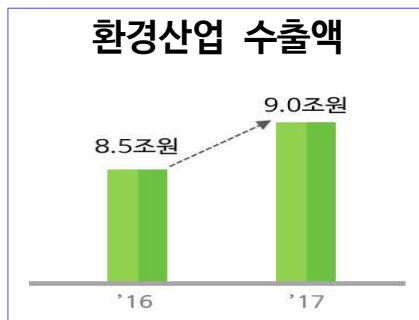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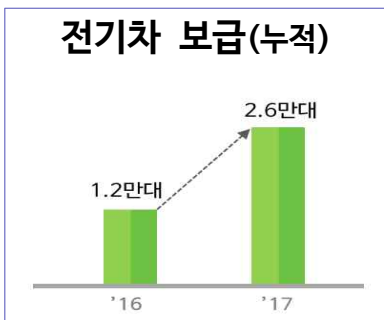
1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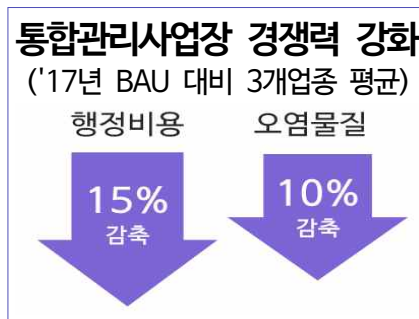
2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



3 미래 환경수요 적극 대응



4 새로운 환경 제도의 조기 정착



①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대상 차량은?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-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(EURO III 이하)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하였거나,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임
 - *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운행제한 대상차량 → 서울시에서 단속(단속카메라 13개 지점 46대) → 과태료 부과(최초 1회 경고, 2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)
-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(DPF)를 부착*(2.5톤 이상 차량)하거나, 자동차 종합검사에 합격(전체 노후경유차)한 후 운행 가능
 - *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장치가의 90% 지원(평균 300만원)

②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?

- 빈틈없는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추진
- 입법예고(안)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제조·수입·판매·유통 전에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함
 - 항균필터와 같은 살생물처리 제품에도 승인받은 물질만 쓰도록 하고,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위해성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음
- 또한, 현행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상의 위해우려제품 관리체계를 동 제정법으로 이관하여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,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하였음

③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은?

- 그간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, 도시 침수, 수질 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·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
- 도시별 LID(Low Impact Development)를 적용하는 국고보조사업*과 함께 물순환 개선 기본계획 수립, 조례 제정 등으로 도시 전반에 LID 기법을 적용하고,
 - * 광주, 대전, 울산, 김해, 안동 5개소의 불투수면적율이 높은 도심 지역에 빗물 정원, 옥상녹화, 투수블록 등의 LID기법을 적용('17~'20)
-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

④ 소비자가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판매처에서 거부할 경우 대처는?

- 주류 및 음료병에 표기된 빈용기 재사용표시와 보증금액*을 확인하고 소매점(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)에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
 - * '16. 7. 1. 빈용기 재사용표시 고시에 따라 18mm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규정
- 아울러, 판매처가 빈병 반환을 거부할 경우 '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(1522-0082)'나 관할 지자체(민원실 등)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'빈용기 신고보상제'가 시행되고 있으며,
 - 해당 소매점은 과태료(300만원 이하) 처분 됨

⑤ '17년 전기차 구입 시 혜택과 구입 절차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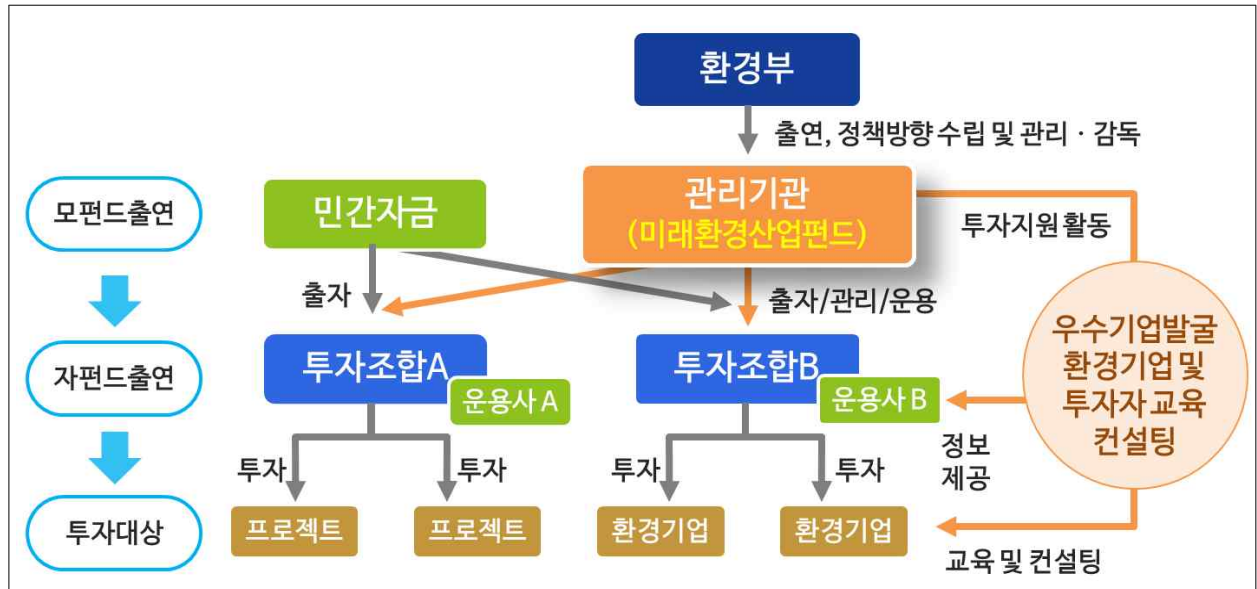
- 국고보조금 1,400만원, 지자체 보조금 300~1,200만원을 지원받으면 1,600~2,300만원(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)에 전기차 구매 가능
 - 이와 별도로,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**완속 충전기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**
 - 완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시 연간 140만원 이상 연료비 절감*
 - * 연간 14,000km 주행시(휘발유차 100km당 10,825원, 전기차 100km당 1,132원)
-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**자동차 대리점에 방문**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대상여부 확인 후 구매절차 진행
 - '17년부터는 자동차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콜센터(1661-0970)에 전화하면 구매절차 진행 가능

⑥ 미래환경산업펀드의 조성 목적과 주요 투자 분야는?

-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환경기업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스타 환경기업 육성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
 - 정책자금 융자(약 2,000억원), 사업화지원(약40억원) 등 기존 정부지원은 예산의 한계, 기업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확대에 한계
 - * 해외 환경시장은 약 1천조원 규모이나 민간투자는 벤처캐피털 투자의 약 2%로 저조
 - ** 타 부처에서도 소관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분야별 특화된 펀드(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등) 운용 중
- 동 펀드자금으로 유망 환경기업 및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 지원
 - 투자대상은 전통적인 강점 환경산업(물, 대기, 폐기물)과 미래유망 분야(환경보건, 기후, 지식서비스, 환경복원·복구)를 포함

- 기업투자는 민간투자자와 정부지원 경계선에 있는 확대기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여 순수 민간투자가능 수준으로 진입 유도

<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체계 >



- **수도권 운행제한 제도** : 수도권(대기관리권역) 내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금지
 - ※ '17년 서울시, '18년 인천시·경기도(17개 시), '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

- **인공지능 활용 예보모델** : 과거와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기상 등에 따른 대기오염도 변화경향을 분석하여 미래 오염도에 영향을 미칠 인자 도출 및 특성을 파악하여 대기질 예보에 활용

- **살생물제** : 살생물질, 살생물제품,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

<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>

살생물제	정의	예시
살생물질	유해생물을 제거, 제어, 무해화(無害化),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	PHMG, PGH, CMIT/MIT, OIT 등
살생물제품	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	소독제, 방충제, 살충제, 방부제, 가습기살균제, 오존/이온 발생기 등
살생물처리제품	살생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제품 중 유해생물의 제거 등이 주 기능이 아닌 제품	항균 에어컨필터, 모기퇴치 옷, 탈취 양말, 보존제가 함유된 세정제·방향제·탈취제 등

- ※ OIT는 살생물질,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, OIT 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

- **위해우려제품** :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유출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제3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제품

- ※ ①세정제, ②합성세제, ③표백제, ④섬유유연제, ⑤코팅제, ⑥방충제, ⑦김서림 방지제, ⑧접착제, ⑨다림질 보조제, ⑩방향제, ⑪탈취제, ⑫물체 탈·염색제, ⑬문신용 염료, ⑭인쇄용 잉크·토너, ⑮소독제, ⑯방충제, ⑰방부제, ⑱살조제

- **녹조 현장 실증실험** :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녹조 현상의 원인과 발생과정 규명을 위해, 하천의 일부를 차단하는 실험시설을 설치하여 영양염류·빛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며 수행하는 실험
- **총인(T-P)** : 물속에 포함된 인(P)의 총량. 합성세제나 축산폐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, 조류(녹조) 발생의 원인이 됨
- **지진 관측망** : 지진동 관측을 위해 전국에 분산 설치한 지진관측 장비와 자료수집 네트워크 일체
- **특이기상 연구센터** : 기후변화 등으로 심각해지는 ‘특이기상(장마, 폭염, 대설 등)’ 관련 연구주제에 대해 센터를 지정하여 장기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육성
- **한국형 수치예보모델** : 한반도 기상특성에 적합한 최첨단 기술 수준의 예보현업 운용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된 세계적 수준의 전지구 수치예보모델과 자료처리시스템(개발기간: ‘11~’19)
- **폭염지수** : 습도와 일사량의 영향이 반영된 온열지수(WBGT)를 기반으로 개발된, 대상과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폭염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수
 - ※ 온열지수(Wet Bulb Globe Temperature) : 실외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기온, 습도, 복사열, 기류 4가지 요소가 반영된 열환경지수
- **가뭄 예·경보제** : 기관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하고 발표기관(국민안전처)과 시기(매월 10일) 및 예·경보 발령단계(주의-심함-매우심함)를 일원화하여 가뭄 예·경보를 실시하는 제도. ‘16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하였으며, ‘17년 1월부터 정식 운영
 - ※ 참여부처 : (국민안전처) 주관, 발표, (기상청) 기상가뭄, (환경부, 국토부)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, (농림축산식품부) 농업용수 가뭄

- **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** : 층간소음 갈등 상담 및 소음측정 등을 무상 지원하는 서비스(한국환경공단에서 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, ’13.4 ~)

< 업무처리절차 >



- **타이어소음 자율표시제** : 타이어제조사별 자체 시험시설을 통해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 성적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제도
- **저영향개발(LID) 기법** : 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자연적인 빗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빗물정원, 옥상녹화, 투수블록 등 빗물의 침투·저류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연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
- **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** : 소비자가 온라인·콜센터를 통해 TV·냉장고 등 대형가전제품의 배출을 예약하면 수거전담반이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수거하는 제도
- **국립공원 명품마을** :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 대해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마을사업

- 탄소포인트제 : 가정(아파트)·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·가스·수도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,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
 - ※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('16.12~'17.12) : 주행거리 단축 또는 친환경 운전(급가속, 급제동 지양 등)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
- 녹색매장 : 친환경제품 판매장소를 설치·운영하는 매장 중 건축, 환경친화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, 매장운영·물류·교육 등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친환경성을 만족하는 매장. 「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
 - ※ 지정기준
 - (대규모 점포) 경영시스템, 경영활동, 환경개선성과 3개 부문, 25개 항목 평가
 - (중소규모 점포) 경영시스템, 경영활동, 환경개선성과 3개 부문, 10개 항목 평가
- 물산업 해외진출 플랫폼 : 대·중소기업, 민·관동반 물산업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, 한국물포럼, 수출입은행, KOICA, KOTRA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해외건설협회, 지자체 및 물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진출 협력체제
- 나고야의정서 : 생물자원(유전자원) 이용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국제 협약으로써, 2010년 채택 되어 2014년 발효
- 생물자원 : 인류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용되거나 잠재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일부분, 집단, 유전자원, 생태계 내 생물학적 부분.
- 생물소재 : 생물자원 중 제품생산 등 산업적 이용의 기본재료
-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: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공급·이용하기 위해 조직배양 등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

- **환경전문 무역상사** : 중소·중견 기업의 신시장개척, 수출 확대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무역상사(기업 또는 기관)로서 환경분야에 특화되어 내수·수출 초보 환경기업을 대신하여 환경산업 분야 수출 업무를 수행, 성과 및 실적(레퍼런스)를 공유하는 역할 수행
- **친환경에너지타운** : 소각장, 매립장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문제도 해결하며, 지역환경도 개선하고 주민소득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
- **환경책임보험** :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
- **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** : 원인자 미상·무자력·부존재 또는 배상책임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오염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건강피해는 피해등급에 따라 의료비·요양생활수당·유족보상비·장의비를 지급하고, 재산피해는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

종 류	내 용
의 료 비	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발생 된 치료비를 기준에 따라 지급
요양생활수당	피해등급에 따른 요양 및 생활비용을 월 정기금으로 지급
장 의 비	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장의비를 기준에 따라 지급
유족보상비	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
재산피해보상비	피해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

- **통합환경관리제도** : ① 현행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 등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, ② 오염배출의 효과적 저감과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, ③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방식으로 사업장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제도

- **최적가용기법(Best Available Technology)** :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계, 설치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 기법으로서,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·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(Best) 기술적·경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(Available) 관리기법·기술(Technology)의 총칭
- **최적가용기법(BAT) 기준서(BREF, BAT Reference)** :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업종(19개업종)별로 작성되며, 업종별 BAT, 산업특성, 연료·원료 투입량, 주요 오염물질, 환경오염저감기술, 관리방식, 배출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장 환경관리 기술안내서로서 사업자의 허가신청서 작성과 허가관청의 신청서 검토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
- **위해관리계획서** : 사고대비물질(69종)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취급시설 설치·변경전 및 매5년마다 작성·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로, 사고예방, 비상대응 및 복구조치계획 등이 포함됨. 위해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자는 화학사고 위험성 및 사고시 응급행동요령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하여야 함
- **화학안전공동체** : 화학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(기술, 교육 등)하는 산업협력체로 '17년 현재 585개 기업(대기업 107, 중소기업 478)이 참여 중
- **매립·소각부담금** :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 의무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